지역 **메 아 리**

부안군, 계화면 일원 축사 불허가취소 소송 잇따라 승소

부인군이 계화면 일원 대규모 축사 11건에 대한 건축불허기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해진

부인군은 2018년 계회면 궁인된, 의복리, 양산리에 신청한 축사 33건(계사 18, 우사 15)에 대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 노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 계회면 전지역을 전부제한지역 으로하는 2018년 4월 30일자 개정된 부인군기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하여 건축불하가 처분하였으며, 그 중 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5월 30일 11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2016년부터 소송 제기된 계회면 일원의 대규모 축사에 대한 건축불하기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새만금시업지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최종 승소환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민원과 이재원과장은 "이직 4건에 대한 소송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지만 지난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로 주변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축사의 단지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의무인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한 부인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기해농민봉기 학술대회 가져

정읍시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영진)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 서 기해농민봉기에 대한 재조명 학술대 회를 가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제2의 동학농민혁명으로 평가되는 기해농민봉기 2주갑(120주년)을 맞아 학술적 이론을 통해 그 의의와 위상에 대해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 1부에서 조광환 동학역사문화 연구소장은 '무술・기해농민봉기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진우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운영위 원의 '기해농민봉기 주요 인물 분석', 이 영호 인하대 교수의 '동학농민운동의 계 승과 영학당 운동', 김영진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이사장의 '기해농민봉기 선 양사업의 방법과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 행됐다.

2부에서는 종합 토론을 통해 기해농민 봉기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했다. 동학 농민혁명이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 으며 대한민국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확 인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정읍에서 발생 한 기해농민봉기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 하기 위한 선양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토론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원전제도 개선에 목소리 높여

고창군, 한빛원전 사건사고 관련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등 대책 요구

인접한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창군이 불합라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 고 나섰다.

지난 31일 고창군은 한빛원전 사고 관련 '반복되는 인적실수와 관리 감독 소홀 등은 최고의 안전등급이 요구되 는 원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시안으로 판단하고, 원지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원전 최인접 지지체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별다른 방재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 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개선 요구 시항으론 고창 민간 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와 관련 고창군 은 평상시 방사선 환경감시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분석 전담기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가 어려워. 바닥에 떨어진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고창군만의 전문 방사능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하고, 고창군은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도, 조사에참여할 권한 없어. 당연히 가동중지된원자로의 재가동 승인권도 권한 밖이라며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또한, 고창군은 현행법상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영광군과 달리 지역 지원시설세를 못받는다며 방재대책 재

협의 및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마련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지원시설세 개정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진했다.

앞서 고청군은 지난 27일 영광방사능 방재센타에서 열린 영광·고창 원자 력안전협의회 긴급공동회의 에 참석해 원안위 측에 고창군과 영광군 주민이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 명문회된 재발방지대 책 미려을 촉구했다.

고창군 원전팀 홍민수 팀장은 "고창 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속조치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시민단 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정부와 관련 중앙부처·해당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문화도시 정읍' 위한 대장정 시작

시, 오늘 문화도시 포럼 개최

정읍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자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든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예술로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 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5년 동안 최대 200억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말 공모 신청을 한 후 11월 말 1차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예비 문화도시 가 되고 이후 1년간 활동을 평가해 최종 문화도시 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문화도시 공

모사업 선정에 의지를 보이며 문화

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오늘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다시 피는 녹두꽃, 다시 피어나는 문화도시 정읍 이라는 주제로 125인의 정읍 문화도시 포럼 을 개최한다.

지역 주민들과 문화도시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하고 정읍시가 법정 문 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 안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토 대로 정읍만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정읍의 특화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 조언할 '전문가 5인 발제'와 '125인 시민 대토론회'등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차재근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와 전영철한국지역창생연구소장, 주재근 이화여대음대 겸임교수, 김선애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순으로 각 분야 전문가 5명의 발제가진행된다.

2부에서는 '동학 125년 다시 피는 녹두꽃, 다시 피어나는 문화도시 정 읍' 등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정읍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관광산업 연계형 창업지원사업 실시

부인군은 관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부인군 관광산업 연계형 창업지 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업은 부안군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전주기전대학이 수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시업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창업 멘토링 등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수행기관인 전주기전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2주간의 창업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수료생은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최대 13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창업 공통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창업자 맞춤형 1대 1 덴토링이 진행 돼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의 전문가를 섭외해 덴토, 덴티로 매칭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배창업자 만남, 창업 자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사후관 부안군은 지난해 취업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 창업지원 사업으로 부안 군 미취업자들의 취·창업을 지원하

고 있다.

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전화(☎ 063-280-5238) 나 이메일(suyong2@kijeon.ac.kr)로 가 능하며 신청서는 전주기전대학교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부인군 관계자는 "지역민을 위한 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지원사업 을 통해 부인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보건소가 최근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 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사 자격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본인 의사가 중요!

고창 관내 보건지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해져

앞으로 고창군내 가까운 보건지 소에서도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 록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내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항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읍내에 있는 고청군 보건소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창군보건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관내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문강사 초빙)을 진행하고, 상담사 자격을 부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 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 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 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고창군에선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돼 지난해 281명, 5월 현재까지 는 547명, 총 828명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고창군 최현숙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항 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창보건소는 환자 본인 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

정읍시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시는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현재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매출액의 0.8%) 중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지역 내 23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4억5000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 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 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씩 연 12만원(최대 12회)를 지원한다.

시 관계지는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 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 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